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인쇄/1998년 12월 28일

발행/1998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통일정책실

등록/제2-2361호(97. 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50-8

4,000원

연구보고서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 관 희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핵합의(Agreed Framework)의 핵심사항으로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대체에너지'로서의 중유 제공과 함께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한국은 경수로사업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위임받아 사업비용의 약 70%를 분담하기로 내정되어 경수로사업의 최대 주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전망한 후, 경수로사업을 통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접촉 증대로 인한 북한의 대응 및 태도변화를 고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1.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전망

경수로사업은 북한핵의 동결을 전제로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핵의 동결·해체를 통해 국가안보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이룩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경수로사업은 분단 이후 최대규모의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북한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경험과 선례가 될 수 있고, 근로자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주민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경수로사업은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운영되는 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1995.12)에 의하여 추진되나,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가 공급되고, 또 실제시공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책임관리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명백해지게 되었다. 당초 북한은 한국의 역할을 배제하고 미국만을 경수로공급 주체로 상대하려 하였으나, 결국 경제적 실리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8월부터 부지정지와 임시숙소 건설 등을 위한 사업부지공사(PWC: Preliminary Works Contract)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왔다. 당초 초기 부지정지공사 기간은 1년이었으나, 재원분담 협상이 지연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1998.8.31)하여 일본 등이 재원분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1999년 1월 15일 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그동안 한·미·일·EU 등 KEDO 집행이사국간 8개월여 기간 동안 7차례의 재원분담 협상이 개최되어 왔으며, 7월말 잠정적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북한의 로켓발사로 서명을 보류하였던 일본이 1998년 10월 21일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1998년 11월 9일 KEDO 집행이사국은 마침내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대북 경수로사업 예상사업비가 46억 달러(환율 1달러당 1,100원 및 물가상승률 연 2.1%)로 확정되었으며, 한국이 '중심적 역할'에 의거 실제공사비의 70%(32억 2천만 달러)를 원화(貨)로 기여하고, 일본은 1,165억엔(10억 달러)을 정액으로 기여하며, 미국은 중유 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EU는 7,500만 ECU를 기여하기로 하였다.

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1995.12.15)한 이후, 그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의정서 협상을 벌여, 현재까지 6개의 의정서 체결을 완료하였는 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수」, 「서비스이용」,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가 그것이다. 향후 체결해야 할 의정서로서는 「품질보증」, 「훈련」, 「인도 일정」, 「핵사고시 책임」, 「상환조건」, 「핵안전」, 「사용후연료」 등 7개의 의정서가 남아 있으며, KEDO는 본 공사를 위한 주계약 체결에 필요한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의정서를 우선 체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훈련」의정서는 금년에 협의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로켓발사로 보류되었다. 한편 「품질보증」의정서 제3차 협상이 1998년 8월 10~27일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타결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협상이 지연되고 미국의 증유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자, 북한은 핵 재개발 의도를 드러내었고, 특히 1998년 8월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금창리 일대의 대규모 지하 핵의혹 시설 공사로 북한핵 문제는 한반도 국제정치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의 핵합의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의 핵동결에 있는 만큼,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 제네바 핵합의, 곧 경수로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핵 투명성 확보와 미사일 개발 중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핵·미사일을 외교적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미·북 양측간 지속적인 접촉과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그리고 특히 경수로사업은 이러한 미·북접촉의 성과에 좌우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다.

우여곡절 끝이라도 미·북간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경수로사업은 보다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 경수로사업은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며, 한반도 안보상황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미·북접촉의 성과는 미국의 대북한정책 전환여

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의회내에 보수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바 핵합의의 유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핵합의의 전면파기와 경수로사업의 전면중단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대북신뢰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안보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2. 경수로사업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남한의 IMF 경제위기와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신정부의 출범, 그리고 북한내부 체제위기상황의 가속화 등 격변하는 대내외의 정세 속에서, 북한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체제변화 및 체제와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정책설정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은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경제적 실리획득 면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부지준비공사 등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간 관계 개선과 상호신뢰 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수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한 근로자간 접촉을 통해서 남한의 실상과 자본주의 체제의 높은 생산성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경수로공사를 통해서 현대화된 장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KEDO와 남한 노동자의 의·식·주 환경이 목격됨에 따라 북한의 국내 환경과 비교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 외에, 양호한 식사조건과 의류 및 생필품의 제공을 통해 남북한간 생활수준의 비교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근본 문제에 관하여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부지준비공사 기간중 남북한 근로자의 공동작업은 수십년간 남북한 체제가 가져 온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도 되고 있다. 앞으로, 상호이해와 적응의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경수로사업 완공시까지 연인원 1천여만명과 1백만톤에 이르는 장비·자재가 동원되고, 피크시에는 매일 1만여명에 달하는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지 준비공사에 남북한 근로자 약 250명(북측 100명)이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천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함께 일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육상, 해상, 공중 등 남북한 통로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는 장기간에 걸쳐 북한사회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통합' 실험장으로서, 남북관계에 매우 의미깊은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남북관계 개선방안

경수로 사업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전략은 북한핵의 동결·해체가 7,000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인 만큼, 한반도 안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북한변화 유도를 위하여 점진적이

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루-트로 활용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미공조는 지난 수십 년간 대북억제 및 봉쇄,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붕괴 대비, 북한 연착륙 유도 등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다.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의 정책공조는 동 사업의 성패를 담보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수로 사업비용 분담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북한정세에 대한 양국공동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북 정책공조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 영변 북방 금창리의 지하시설 의혹에 대한 양국의 의견조율은 이후 북한에 대한 양국의 정책공조에 커다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의도에 민감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반면, 한국정부는 대북 포용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기초하에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북 경협확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양국간 이러한 미묘한 입장차이는 1998년 11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기도를 확고히 저지한다는 선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의 핵동결 추진과 경수로사업 진행과정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국 안보공조에 기초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동결의 완수는 경수로사업의 지속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후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된 시설들'을 핵합의(1994.10.21) 이후 1개월내에 동결하고 그 동결 여부를 IAEA에 의하여 확인받도록 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

측된다. 약 8,000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이 1996년 4월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다시 재개되어 1999년초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의 제3국 이전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경수로 핵심부품이 제공되는 시기에 북한의 핵동결과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IAEA의 특별사찰을 포함한 핵안전조치협정의 완전이행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또한 경수로 2기가 완성되기 이전에 북한은 제반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의혹을 사고 있는 지하시설의 사찰 및 투명성 확보와 미사일 개발 의혹의 해소가 아울러 관철되어야 한다.

셋째로, KEDO의 틀을 활용한 남북관계 증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KEDO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추구가 기존의 남북관계와 다른 점은, 상호불신이 깊은 탓에 협상이나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남북관계에 KEDO가 다자간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남북 양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KEDO체제를 통해 참여국가간 상호접촉의 구도가 경쟁적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관계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특히 이러한 다자주의적 국제관계의 율타리 속에서도 남북이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수로사업은 형식상으로는 KEDO-북한간의 관계로 포장되었으되, 한국 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하기로 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등장함으로써 실제로는 남북관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주변 관련 강대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에 일정한 물적 보상을 제공하고, 남북 양측에게 민감한 한반도 평화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회피한 것도 경수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경수로사업이 국제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상호보완하여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경수로사업의 당위성과,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재정분담의 불가피성, 그리고 사업비 지출이 7~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일단 재정분담이 확정되면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4. 결론

경수로사업의 특징은 북한의 핵개발을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일정한 물적(物的) 보상을 공여하여, 경수로건설과 북한핵 동결이라는 상호이익 거래(plus-sum game)를 통해 일종의 '홍정체제'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상 서방세계의 어느 누구도 북한과 타협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었고, 대북한 관계설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KEDO를 통한 경수로사업의 성공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북한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이며, 매우 심각한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 내지 분해의 과정 중에 있고, 지도층의 세계인식도 지극히 비합리적인 수

준에 머물러있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갈구하고 있으나, 대외관계의 확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체제혼란과 체제와해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경제지원 욕구와 체제혼란 우려간의 딜렘마를 다자간(多者間) 협력의 틀인 KEDO의 우회적 메카니즘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요컨대, 한국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함으로써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 일본, EU 등과 함께 KEDO의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남북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대남 의존도 내지는 흡수통일로의 두려움을 감소시킨 것,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등장하여 실질적 공사를 담당하지만, 형식상으로는 KEDO-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 등이 바로 북한의 딜렘마와 남북관계의 난제를 해결한 경수로사업의 독특한 방식인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당국자간 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이 체제고수를 위해 처음에는 완강하게 접촉을 거부하지만, 북한이 당면한 현실적 난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대북관계를 추구할 경우, 남북 교류확대의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수로사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경분리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어 남북 양측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예상외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수로건설과 중유 제공이라는 명백한 북한에의 보상 제공과 남북한 직접거래가 아닌 국제기구(KEDO)를 통한 대북한 협상 및 거래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중

속 또는 흡수통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신뢰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사업현장에서의 남북 교류·접촉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지구는 대규모의 남북한 근로자들이(본공사시 1만여명 공동작업 참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 남북한 인적 교류·접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경수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본공사 진전시는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소극적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남북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방향에서 남북 근로자간 교류·접촉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근로자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북한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전망	5
1. 사업의 의의	5
2. 사업개요와 주요 현안문제	8
가. 사업 개요	8
나. 재원분담 협상	10
다. 중유비용 분담 문제	14
라. KEDO-북한간 의정서 협상	17
마. 저비용 발전설비로의 대체 문제	18
3.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경수로사업 전망	19
가. IMF경제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19
나. 새로운 북한핵 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22
III. 경수로사업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29
1.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29
가.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	29
나. 북한의 대응: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간의 딜레마	36
2. 북한체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영향	39

IV. 남북관계 개선방안	43
1. 정책과제	43
가. 한·미의 대북한 포용정책 공조	43
나. 북한의 핵동결 이행	47
다. KEDO의 틀을 활용한 남북관계 증진방안 모색	49
2. 추진방안	51
가.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51
나. 남북 교류·접촉 확대를 위한 현장관리 방안	55
V. 결 론	57

I. 서 론

북한에 대한 경수로건설 지원 사업은 1994년 10월 미·북간에 이루어진 제네바 핵합의(Agreed Framework)의 핵심사항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 체제위기에 직면해 온 북한은 생존전략으로서 핵개발과 대미 직접외교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과 맞물려 제네바 핵합의를 이룩하였고, 그 결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하게 된 것이다.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의 합의사항들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가동을 중단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하부구조의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핵, 에너지 및 경제적·외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일종의 일괄타결식(package) 거래이다. 이외에 북한은 NPT 복귀, 폐연료봉의 밀봉후 제3국 이전, 경수로 핵심부품 공급 이전 IAEA특별사찰을 포함한 핵안전조치 협정의 전면이행을 수용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경수로건설 이외에 '대체에너지'로서 중유 제공과 미·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북한에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북한 영변 인근의 대규모 지하공사에 대한 핵의혹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어왔다.¹⁾ 특히 미국은 과거보다는 미래의 북한 핵동결 이행에 핵합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IAEA와의 견해 차이를

1) 이는 제네바 핵합의에서 약속된 핵관련시설의 동결과 폐연료봉 봉인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온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에 들어 대북 중유제공의 지연과 재원분담 협상 지체 등으로 경수로사업이 차질을 빚게되자,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협조 중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8년 10월 재개된 폐연료봉 봉인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999년 초 100% 완료될 예정이다.

2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북한 핵동결의 관건은 경수로 핵심 부품이 제공되는 시기에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포함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북한 핵동결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미·양국을 포함하는 KEDO 집행이사국의 북한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핵의혹을 북한이 해소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제네바 핵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네바 핵합의에 입각한 경수로건설사업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는 바,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영변 인근 대규모 지하 핵의혹 시설공사로 인하여 한·미·일 3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후 특히 그러하였다.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는 역경(逆境)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체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약 북한 핵의혹 시설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되어 제네바 핵합의가 유지되고, 경수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핵의 동결을 통해 한반도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유익한 성과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경수로 건설사업이 분단 이후 최대의 남북협력 건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수로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북한내부와 미·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은 대결과 화해의 명암(明暗)이 교차하는 매우 불안한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내부개편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강성화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대남·대미정책상 제한적이거나

경제적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등 체제보존과 실리추구라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당국자간 회담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현대그룹)과 북한과의 남북경협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개발 기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북정책을 목표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을 둔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4자회담을 추진하고, 제네바 핵합의의 실천을 위한 미·북회담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국제협약이라 할 수 있는 제네바 핵합의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국제적 사업이며, 국제 컨소시엄인 KEDO와 북한간 공급협정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방법—국제관계를 이용한 남북관계 증진—의 유용성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은 현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개선 정책, 한·미양국의 공조하에 추진 중인 4자회담, 그리고 미·북간의 쌍무회담 채널 등과 연계하여 남북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별도의 루-트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수로사업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위임받아 경수로 비용의 약 70%를 분담하기로 내정되어 경수로사업의 최대 주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대북한 포용전략의 일환으로 경수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책 협조와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

4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전망한 후, 경수로사업을 통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와 접촉 증대로 인한 북한의 대응 및 태도 변화를 고찰하고, 북한의 궁극적인 체제개혁과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대북한 정책공조 방안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한 정책동향과 미·북 관계 진전상황(외교관계 및 핵협상 등)에 따른 한·미관계, 그리고 총공사비와 재원분담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도 아울러 고찰될 것이다. 그리고 경수로건설 사업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서 함축하는 전반적 의미를 분석·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경수로사업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 및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북한 정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KEDO 및 미국과의 효율적인 정책공조를 기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한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KEDO와 같은 국제 컨소시엄을 활용한 대북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는 경수로사업의 의의와 사업개요 및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경수로 사업에 대한 한·미·일·EU 등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최근 재연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경수로사업을 전망한 후, III장에서는 경수로사업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대응을 분석하고, IV장에서는 경수로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KEDO를 활용하는 이른 바 '다자주의적' 대북한 관계의 틀 속에서 남북관계 증진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II.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전망

1. 사업의 의의

대북 경수로사업은 북한핵을 동결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미 직접 외교의 산물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핵확산 방지를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핵을 동결·해체하여 국가안보의 최대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한국정부와 국민이 추진해 온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가 된다. 경수로사업이 북한핵의 동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mechanism)”이라는 공통된 평가를 얻게 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이다.²⁾

동시에 경수로사업은 분단 이후 최대의 남북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북한체제와 사회에 대한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북한의 개방 및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향후 남북경협을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통일대비 측면에서도 남북 공동전력망을 구축하여 남북통합시 유리한 경제통합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근로자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주민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2) 1998년 9월 24일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 (북핵 동결 촉구 및 경수로사업 지원 다짐) 참조.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동결 준수 여부와 북한체제 장래의 불투명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의 태도 및 입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 교류·협력의 증진, 그리고 북한의 연착륙 유도라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를 매우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난제이며 또한 특이한 점이다. 특히 최근 영변 인근 대규모 지하공사에 대한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 의혹이 가시지 않음에 따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하는 제네바 핵합의의 유지와 경수로건설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가 문제시 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한국이 최근 IMF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사업 비용 부담 규모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국민정서도 IMF위기 이전보다는 덜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측 분담 비용이 북핵 동결로 인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방위 비용의 성격이 짙고, 실질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측 부담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인건비, 시공비 등으로 상당부분이 국내경제로 환류되고, 건설기간 동안 총 1,000만명(man/day 기준)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국내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특히 한국측 부담은 원화(貨)로 장기간에 걸쳐 매년 분할 분담하게 되어 있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이 경수로사업이 갖는 긍정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에 걸맞는 재정분담이 불가피하므로, 단순히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 경수로 사업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분단 이후 경제분야를 포함하는 타 모든 분야

의 중요성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한민족에게 부여해왔다. 먼저 안보상의 토대를 확고히 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경제분야를 포함한 타 분야 전반에 걸쳐 발전의 가속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과 사찰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의 해결방향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에 엄청난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북한이 지하 핵의혹 시설 사찰을 수용하고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여, 경수로 건설을 계기로 핵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그 여부가 검증될 경우, 이는 바로 종래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군비축소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는 국방비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남북한 공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 동안 남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로 인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경험해왔으며, 남북한 경제는 그에 따른 엄청난 부담과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대결에 따른 민족적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남북경제협력이 가져다 줄 “상호보완적” 경제이익을 남북한 공히 취할 수 있다면, 이는 이른 바 “평화의 경제학”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³⁾

3) 미국 국방비의 현저한 감소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연주, “평화의 경제학,” 「한겨레신문」, 1998.4.10, 참조.

2. 사업개요와 주요 현안문제

가. 사업 개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4년 10월의 미·북 제네바 핵합의에 의거,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일 3국의 주도하에 1,000 MWe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 2기(1,000MWe×2)를 유상으로 공급받기로 되어있다. 경수로 발전소의 공급은 2003년을 목표시한(Target Date)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나, 그 동안 협상과정의 우여곡절과 남북관계 불안정 및 경수로 사업에 내재해 있는 많은 변수들로 인해 상당기간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수로의 재원확보와 공급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되었는데, 1995년 3월 한·미·일의 주도로 KEDO(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조직하였다. 당초 북한은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KEDO나 한국과 협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미국과의 협상을 주장하고 미국 경수로만을 받아들일 것을 고집하였으나, 1995년 6월 쿠알라룸푸르 합의에서 KEDO와 협상해 나간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불분명한 채 남아 있었으나, 이후 KEDO-북한 협상에 한국이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역할은 명백해지게 되었다. KEDO는 북한과의 협상 결과,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경수로사업은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운영되는 KEDO를 통해 추진되나, 실제시공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서 책임관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8월부터 부지정지와 임시숙소 건설 등을 위한 사업 부지공사(PWC: Preliminary Works Contract)가 순조롭게 진행되

어왔으며, 이후 일괄도급 방식(TKC: Turn-Key Contract)에 의한 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초기 부지정지공사 기간은 1년이었으나, 재원분담 협상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본공사 착수가 늦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KEDO는 공사기간을 1998년 10월 15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일본이 재원분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다시 1999년 1월 15일까지 3개월 더 연장된 상태이다. 부지공사는 숙소, 식당, 사무실,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일부 부지정지(총공사의 5분의 1에 해당) 사업으로서, 공사시작 1년여가 지난 현재 초기공사 물량이 완료되었다. 현재 약 3만 4천톤의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었으며, 남한측 근로자 150여명과 북측 근로자 100여명이 공동작업을 진행중이다. 부지공사 비용으로 한국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4천 5백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1998년 10월 15일부터 1999년 1월 15일까지의 연장기간 동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자 신용방식(외상)으로 약 85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⁴⁾ 이는 1999년 6월 30일까지 KEDO집행이사국의 기여금으로 상환받기로 되어있다.

한국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사업의 중단없는 추진 계획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도 재원분담 협상에 마침내 서명함으로써 북한이 핵시설 의혹을 해소하는 한 전반적인 국내외 기류는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KEDO간의 주계약과 한·일양국-KEDO간의 차관공여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

4) 이 금액은 환율 1,370원(1\$당)으로 산정된 것이며, 일부 언론은 환율 1,300원(1\$당)으로 산정하여 890만 달러로 보도한 바 있다.

나. 재원분담 협상

그 동안 경수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경수로사업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상해왔다. 경수로사업의 총 예상비용은 제네바 핵합의 당시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52억 달러에 육박하였다가,⁵⁾ 한국의 IMF위기하의 환율상승을 고려하여 사업비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총 사업비 규모를 46억 달러로 최종 합의하기에 이르렀다.⁶⁾

한국측은 그 동안 ‘국내 경제사정’과 ‘경수로사업에서의 중심적 역할’이라는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일·EU 등 KEDO 집행이사국간 8개월여 기간 동안 7차례의 재원분담 협상이 개최되었으며,⁷⁾ 1998년 7월말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도출에 성공하여,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1998년 8월 31일 정식 서명·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명 당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일본 등 일부 집행이사국이 서명을 보류함에 따라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이 유보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해 매우 경악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후 대북정책 전반을 재고하며(북·일 수교교섭 중단, 대북 식량지원 동결 등) 경수로사업 재정분담 서명을 보류하였으나, 미국 등의 설득으로 1998년 10월 21일 서명을 완료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9일 한·미·

5) KEDO는 1997년 11월 2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경수로건설 총공사 비용을 51억 7,850만 달러로 확정된 바 있다.

6) 1998년 7월 28일 「대북 경수로 재원분담 결의안」이 잠정 합의되어 8월 31일 정식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로켓발사로 일본 등의 서명 유보로 지체되다가, 1998년 11월 9일 마침내 동결의안이 서명·채택되었다.

7) 1차 '97.11.25 워싱턴; 2차 '97.12.8~9 뉴욕; 3차 '98.2.5~6 뉴욕; 4차 '98.3.19~20, 뉴욕; 5차 '98.6.1~2; 6차 '98.6.29~30 브뤼셀; 그리고 7차회담은 '98.7.27~28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일·EU 등 KEDO 집행이사국은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대북 경수로 예상사업비가 46억달러(환율 1달러당 1,100원 및 물가상승률 연 2.1%)로 확정되었으며, 경수로사업비의 재원 분담에 관하여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에 의거, 실제공사비의 70%를 원화(貨)로 기여하고, 일본은 1,165억엔(10억달러)을 정액으로 기여하며, 미국은 중유비용 및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EU는 7,500만 ECU를 기여하기로 하였다.⁸⁾

이와같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수로비용의 분담에 있어서 각국은 경수로사업에 대한 상이한 정책목표, 전략적 의도, 국내 경제사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경수로사업이 갖는 정책목표와 긍정적 효과를 추구하면서도 자국의 비용분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에서 이견을 노정시킨 바 있고, 그만큼 오랜 협상과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에 관한 관련국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제1호기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로서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고 폐연료봉 봉인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 분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한·일 양국에 사업비 분담 이행을 촉구해왔다.⁹⁾ 최근에는 중유 비용까지도 한·일 양국에 분담을 요청해왔는데, 이는 북한핵 동결의 최대 수혜자가 한·일 양국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¹⁰⁾ 한국의

8) KEDO집행이사회 결의안(The Executive Board of the KEDO Resolution), No. 1998-13 (1998.8.31) 참조.

9) 미국은 비용분담 거부 입장을 1998년 2월 5~6일 KEDO집행이사회에서 분명히 한 바 있으며, 미행정부는 1998년 10월 1일 시작되는 '99 회계연도 예산에 경수로 건설 분담비를 계상치 않고 있다.

10) 1998년 5월 1일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 언급 참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채원부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충분히 그 능력이 있음을 강조해왔다.¹¹⁾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비판적 자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되며, 미국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안전관리비’ 명목의 상징적 액수(4천~5천만 달러 정도)만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한국·일본이 중유비용 부담 거부의를 명백히 함에 따라, 이의 철회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중유비용 요청에 대한 한·일양국의 거부로 중유비용 조달이 어렵게 되자 미국은 경수로사업비를 일체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KEDO로부터의 대북 중유제공이 지연되고, 채원분담 협상타결이 지체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자, 북한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폐연료봉 봉인작업의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제네바 합의의 주요 목표인 북한핵 동결의 전도를 어렵게 하였다.¹²⁾ 북한의 폐연료봉 봉인작업 중단은 미국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공화당은 중유비용 뿐만 아니라 미국예산으로부터의 경수로비용 충당에도 반대하

11) 미국무성 대변인 루빈(James Rubin)은 1998년 2월 5일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연간 정부예산이 400억 달러에 달하고, 경수로 건설비를 10년간 나누어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하였다. *Korea Herald*, 1998.2.5, 참조; 그러나 미국은 당초의 부담 불가 입장에서 선회, 경수로 비용의 일부 부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미국의 부담 가능액은 총비용에서 한국의 부담액 32억 2천만 달러와 일본의 부담액 10억 달러를 뺀 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로스(Stanley Roth)가 1998년 2월 13일 이 문제에 관하여 “미의회가 재정분담을 위한 미행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2) 북한 영변지역의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이 1996년 4월부터 시작되어 1997년말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수조내 침전물 속에 남아있는 잔해 등에 대한 봉인작업을 1998년초에 실시하고 있던 중, 북한은 대북 경제재제 완화 지연, 중유제공 지연, 경수로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협조중단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이미 동결된 핵시설의 개봉 및 정비실시를 언급한 바 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 발표 및 담화(1998.3.6, 3.31, 6.22, 7.18) 참조; 홍양호,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의 배경, 전개과정 및 전망,” 『평화전략연구』 제3집 (경산대 평화전략연구소, 1998. 11) 참조.

는 입장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경수로 비용 부담 요구와 한·일양국의 중유비용 부담 거부, 북한의 폐연료봉 봉인작업 거부,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의회의 강경한 분위기는 클린턴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클린턴행정부는 경수로사업비의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식으로 절충 타협함으로써 구체적인 액수의 명시없이 부담 여부를 미래의 과제로 남겨두었다.¹³⁾

일본은 북한 핵문제가 자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이 남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향후 통일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을 높일 것을 우려하였다.¹⁴⁾ 또한 일본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미국과 분담한다는 전략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의 협조 요청과 함께 ‘의미있는(significant)’ 역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

13) 잠정타결된 재원분담안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미국의회와 다른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중유공급을 위한 재원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reconfirms its commitment to seek funding for the supply of HFO and for other KEDO needs, as appropriate, from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all other possible sources)”고 하면서, “미국은 1994년 미·북합의문에 따라 신규 예상사업비와 집행이사국들이 공여하기로 한 총기여액간의 차액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in accordance with the 1994 US-DPRK Agreed Framework, the United States reconfirms its commitment to assume leadership for organizing arrangements for financ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budget estimate and the total amount pledged by Executive Board Members)”하였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결의안」(서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1998), 참조.

14) 전동진, 「일본의 대북한정책」(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31.

15) 홍양호,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의 배경, 전개과정 및 전망” 참조.

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다.¹⁶⁾ 북한 핵동결에 관한 안보전략상의 불가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결국 총사업비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분담액인 10억달러 정도를 정액 부담기로 잠정 결정하였다.¹⁷⁾

한국은 경수로 사업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근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심적(central)’ 역할에 맞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일관성있게 천명하여 왔다. 다만 현재의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7차례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약속한 대로 70%를 정률 부담하되(총공사비 하향조정 후 32억 2천만 달러), 이를 최대부담액(maximum)으로 명기하여 추가 부담액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¹⁸⁾ 또한 초기 연도에 일본이 보다 많이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중유비용 분담 문제

제네바 핵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경수로 건설 이전에 북한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에너지’를 북한에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그 대체에너지가 바로 중유(heavy oil)이다. 1995년 1월, 클린턴행정부는 5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보내기로 약속한 바 있었고, 그후 1995년 10

16) 제네바합의(1994.10.21) 이전 일본은 무라야마 총리가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경수로사업에서 ‘의미있는(significant)’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위의 책, 참조.

17) 일본 수출입은행은 KEDO에 무이자 장기융자 형태로 제공할 용의를 밝힌 바 있으나, 일본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어야 일본이 경수로 사업비를 예산국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18) KEDO 결의안 (The KEDO Resolution: 1998.8.31)은 3항 a조에서 이 점을 서술하고 있다: “... the ROK and Japan are ... committed to making maximum contributions equal to their central and significant roles, respectivel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LWR Project ...”

월 미국은 1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선적하였다. 미국은 1996년 10월 부터 북한에 건설키로 약속한 2기의 경수로 중 제1기가 작동할 때까지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중유제공의 총비용은 5억 달러(매년 6천 5백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무성은 북한이 추진하려고 했던 50MWe와 200MWe짜리 흑연감속로 건설을 중지하는 대가로, 그 전력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중유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유가 군사적으로 북한에 직접적 혜택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은 원래 타국으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중유의 비용을 절감시켜 타 에너지원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8년부터 1993년 기간 동안 북한은 연간 34~40만톤에 이르는 중유를 수입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미정부는 의회의 반대로 예산을 얻지 못해, 1998년 5월부터 중유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최근 공급재개를 천명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금년도 중유비용 부족액 중 2천만 달러 가량을 한·일 양국이 분담해주도록 종용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IMF경제위기하에서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대국민 설득이 난망하다는 판단하에 분담수용 불가 방침을 미측에 전달하였다.¹⁹⁾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은 일본이 무라야마 총리 서한을 통해 이미 중유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유비용 분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총리의 그러한 언급은 미국이 경수로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일방적 중유비용 부담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중유비용 요청을 거부하였다.²⁰⁾

19) 1998년 5월 1일 서울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 내용 참조.

20)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

미국은 1998년 11월말까지 1998년도분 약 39만톤의 대북 중유공급을 완료하였다. 나머지 11만톤은 미국의 예산전용(1,200만 달러)을 활용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따라서 1998년도 중유제공 비용 조달은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대북 중유제공을 위한 비용(연간 6,000~6,500만 달러 소요)은 미국의 자체 예산과 EU, 인도네시아 등 여타국으로부터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측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금년도 중유 부족재원을 위해 1,500만 달러의 예산전용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1,200만 달러 예산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1998년 9월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1998년말까지 대북 중유제공을 전량 공급완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미하원은 1998년 9월 17일 1999년도 KEDO지원 예산 3천5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한 바 있었으나, 1998년 10월 15일 클린턴 행정부와의 1999회계년도 예산협상 타결 과정에서 동예산을 부활시켰다. 다만, 미의회는 예산 부활에 임하여 북한 영변 일대의 지하시설 공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부가하였다. 미 상·하 양원 협의회는 KEDO예산 3,500만 달러를 1999년 3월 1일 부터 사용토록 합의하였다. 다만 1999년 6월 1일 이전에 1,500만 달러를 사용하되,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먼저, 제네바 합의 당사자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및 남북한 대화의 이행관련 진전과, 북한의 미·북 제네바 합의 및 부속서의 완전한 이행

지로서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게 제공해주시기로 되어있는데, 1998년도에는 5월말까지 당 해분 50만t 중유중 13만t 밖에 제공되지 못하였고, 1998년도 상반기에 중유 부채액이 약 3,000~4,000만 달러가 되었다. 대북 중유 제공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미국은 중유비용의 부족분을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에게 충당해 줄 것을 1998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요구하였다. 피커링(Pickering) 국무차관과 올브라이트(Albright) 국무장관은 1998년 4~5월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중유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홍양호,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의 배경, 전개과정 및 전망” 참조.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폐연료봉 봉인 및 저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셋째, 북한은 미국이 제공한 지원을 타용도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저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1999년 6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되, 대통령은 하기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첫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 북한과의 의미있는 대화가 개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하 핵 의혹 시설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포함한 미사일 관련 위협의 제거를 위해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한편 북한에 공급된 중유는 선봉, 청진, 평양, 북창, 동평양, 순천 발전소 및 영변 보일러에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중유전용 방지를 위해 선봉(1995.8), 청진(1996.1), 평양(1996.1), 북창(1996.8), 동평양(1997.3), 순천(1997.3)발전소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KEDO-북한간 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1995.12.15)한 이후, 그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벌여, 현재까지 6개의 의정서 체결을 완료하였는 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통행」, 「통신」, 「부지인수」, 「서비스이용」, 「미지급시 조치」의 의정서가 그것이다. 향후 체결해야 할 의정서로서는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 「핵사고시 책임」, 「상환조건」, 「핵안전」, 「사용후연료」 등 7개 의정서가 남아 있으며, KEDO는 본 공사를 위한 주계약

체결에 필요한 「품질보증」, 「훈련」, 「인도일정」의정서를 우선 체결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훈련」의정서는 금년에 협의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로켓발사로 보류되었다. 한편 「품질보증」의정서 제3차 협상이 1998년 8월 10~27일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타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KEDO와 북한은 북한 묘향산 향산호텔에서 고위급 실무협의를 갖고(1998.5.5~9), 경수로 후속의정서 협상일정, KEDO인원의 해상출입 절차, 신포의 은행서비스 개선방안, 경수로부지 공사 근로자들의 인근 휴양지 방문문제 등 현안들과 향후 공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다.

앞으로 KEDO-북한간 합의된 각종 의정서 및 규정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해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 규정 및 절차들은 향후 남북교류협력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저비용 발전설비로의 대체 문제

1998년초 미국, 한국, 유럽 일각에서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고 단기에 건설이 가능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발전설비(특히 화력발전 등)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²¹⁾ 화력발전으로의 대체 구상은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이 IMF경제위기에 처하게 되고 재원분담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자 집중 부각을 받게 된 것인데, 이는 원래 미국 화력발전소 전문업체인 스탠튼 그룹(Stanton Group)이 1995년 이래 거론해왔던 것이다. 그러

21) 보스워드 주한미대사는 “북한이 제의해 오면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 1998.3.24; 제임스 릴리(James Lilley) 전 주한미대사와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 미 비핵확산 정책교육센터 소장도 각각 경수로 건설에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바 있다. *Newsweek*, March 9, 1998.

나 화력발전으로의 대체구상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경수로 제공과 북한핵 동결을 일괄타결한 미·북 제네바핵합의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화력발전으로의 대체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미·북 제네바 핵합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발전용 원유공급 문제 및 지금까지의 경수로 공사 진척상황을 무(無)로 돌리고, 발전소의 형태, 공급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요컨대 화력발전으로의 대체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측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첫째, 미의회내 북한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하에 북한이 과연 복잡한 핵발전소를 필요로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둘째, 비용분담에 관하여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제시의 일환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후 수요자인 북한과 공급자인 KEDO, 한국, 미국의 거부로, 이 제안은 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3.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경수로사업 전망

가. IMF경제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1997년 말 이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 전반, 그리고 특히 경수로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는 국가간 단기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관련국가들이 내부분쟁에 골몰하게 되고 군사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내부체제가 불안정하게 되고 집단 이주민이 나타나는 등 사

회적 소요가 발생하면, 민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IMF체제하의 원화가치의 하락은 남한 정부로 하여금 재정긴축을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고, 특히 국방비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군사력증강 계획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의 금융위기는—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남북한 사이에 심리적으로 균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IMF경제위기는 남북대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남한의 경제위기는 남한 주도의 단기적 통일노력 또는 통일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당할 능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의 주된 관심사를 남북문제 보다는 남한 자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당면 문제로 전환하게 하였다.

희생난망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북한경제의 관점에서 남한의 위기는 유동성 유입의 감소와 그동안 중국 동북지역에서 형성되어 온 구상무역(Barter Trade System)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남한내의 외환위기로 기존의 제한된 대북투자 규모나마 더욱 축소되거나 연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²²⁾ 다만 최근 한국정부의 대북한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에 힘입어 민간부

22) 실제로 IMF체제로 인한 남한의 국내경기 침체로 남북간 교역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1998년 1~4월 기간중 남북한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무려 53%나 감소한 4천 5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는 특히 결제통화인 달러 환율 상승으로 북한상품의 반입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북한상품의 반입을 축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6.26, 참조; 한편, 1998년 1~9월 기간중 남북한 교역규모는 1억 4천 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8%의 감소를 보였으며, 1~10월 기간중 교역규모는 1억 7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3%의 감소를 나타내어,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강산관광 관련 공사장비 및 자재 등의 반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의 남북간 교류·협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과 북한간 합의된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은 남북 경제협 확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수로사업비용 부담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훨씬 소극적이고 덜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서 국제기구인 KEDO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에 왜 한국이 70%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 경수로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은 재원분담 협상이 타결되어 사업비 조달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현재,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많은 애로에 봉착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만큼 선거구민의 정서를 의식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난감한 과제가 남아있다.

한편, 경수로 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남한 인력을 고용하게 되고 그 임금이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지불될 것이므로 한국의 외화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불황과 유효수요 감소의 시기에 오히려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경수로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이 남한의 노동자와 물자 구매 비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²³⁾ 경제 위기에 돌고 돌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수로사업의 전망을 다소나마 밝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23) Stephen Bosworth, "KEDO Project good for South's Economy," *Korea Herald*, 1998.3.18, 참조; 앞 장의 '경수로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참조.

나. 새로운 북한핵 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수로사업은 북한정세의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사업실현에 대한 반신반의 속에서도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제한적·자살적 도발의 위험을 방지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만큼 경수로사업은 북한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서로 교환하는 상호이익 거래(plus-sum game)로서, 종래 한반도에서 전형적이었던 '갈등체제'와는 다른 '홍정체제'로의 전환을 엿볼 수 있게 한다.²⁴⁾

한국은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억제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다. 1998년 후반 들어 발생한 한반도 안보의 위기상황—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지하 핵의혹 시설 공사로 인해 야기된—의 와중에서도, 한국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최선의 대안이 대북포용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책조율을 시도하고 있다.²⁵⁾ 따라서 북한 핵동결이 확고히 이행된다면, 경제적 요인 등 여

24) '갈등체제(conflict set)'란 한 행위자의 움직임이 상대방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고, '홍정체제(trading set)'란 거래를 통해 각자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측에 모두 이롭도록 사고와 행동을 재정향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KEDO체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서는 전성훈,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또한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3), p. 5; 具永祿, “남북한 거래의 분석틀,” 「남북한 정치통합과 남북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참조; 한편, 남북교류의 이론적 고찰에 대하여는 洪官憲,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25) 한국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

타의 요인을 이유로 사업일정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당위적 성격이 한국정부의 입장에 내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경협 확대와 미·북관계 확대, 그리고 한·미양국의 대북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 체제의 무모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지난 1998년 1년간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협상이 지연되고 미국의 중유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북한의 반발과 핵 재개발 위협을 받은 바 있으며, 북한은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야한 수준이나마 북한이 핵 재개발을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²⁶⁾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양국의 핵실험 이후 아시아에서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재개발 위협은 평양정권의 본래적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더욱 우려를 불러 일으켜왔다.²⁷⁾ 이제 1998년 8월의 장

은 취임사('98.2.25)에서 “새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수로건설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강인덕 통일부장관도(98.3.12) “KEDO의 북한경수로 건설비용중 한국측 부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경제위기 아래서도 국제적인 약속은 지킨다”는 것과, 한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한국부담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미·일의 양해를 요청중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 1998.3.13, 참조;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의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 해소와 미사일개발 및 수출중단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대북 식량제공과 맞교환하는 이른 바 ‘일괄타결’안(案)을 제시한 바 있다. 윌리엄 페리(W. Perry) 미대북정책조정관 접견회담(1998.12.7) 내용 참조.

- 26)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내 일부에서 1994년에 폐쇄된 영변 핵원자로의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주장준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으며, 특히 문제의 핵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Washington Post*, May 16, 1998, 참조.
- 27)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미의회 등 조야에서는 핵도협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특히 북한과 이라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위협은 미

거리 로켓발사와 영변 인근, 특히 금창리의 대규모 새로운 지하 핵의혹 시설 공사로 인해 북한핵 문제는 한반도 국제정치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의 초미의 외교적·안보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994년의 핵합의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의 핵개발, 특히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동결시키는 것인 만큼,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특히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 제네바 핵합의, 곧 경수로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저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 미·북간 핵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수로사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11.16~18) 이루어진 제1차 미·북 핵회담에서 미국은 30만톤의 밀을 제공할 것을 확인하면서 핵의혹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²⁸⁾ 이어 제2차 핵회담이 12월 4~5일(뉴욕)와 12월 7~8일(워싱턴) 열린 바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미·북 핵협상은 1999년초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북한의 사찰거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지속과 핵개발 의도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정책담당자들의 언급이

행정부와 의회를 긴장시킨 바 있다. 미의회는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핵문제에 폭발할 지역은 북한”임을 논의하였다.

28) 북한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들른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 특사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활동을 의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compelling evidence)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카트만 발언은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compelling하지만, conclusive한 증거는 없다”고 부연하였다.

1998년 11월 들어서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⁹⁾

앞으로 북한핵 투명성 확보와 미사일 개발 중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핵·미사일을 외교적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미·북 양측 간 지속적인 접촉과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그리고 특히 경수로사업은 이러한 미·북접촉의 성과에 좌우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다. 북한이 단 1회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에 3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라도 미국과의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경수로사업은 보다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현대그룹과의 민간 경제협력사업도 확대·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여타 남북관계의 현안문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1999년 1월로 예정된 제4

29) 일례를 들면, Benjamin A. Gilman, (Chairman of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원칙있는 외교와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대북정책” 주장, *The Washington Times*, Oct. 21, 1998; 로버트 매닝 외교협회 연구원 발언(1998.11.12) 참조; 미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 성명(1998.11.10)은 영변 인근 지하핵시설의 투명성 확보가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의 필수요건을 강조하며, 북한핵 문제가 금전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은 11월 19일 “북한의 핵개발의 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미핵합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미·일 정상회담(11.20)에서 클린턴 미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수상은 북한 지하 핵의혹에 심각한 우려를 같이 하고,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사찰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으며, 로버트 갈루치 전핵대사는 “북한이 지하 핵시설을 개발 중이라면, 제네바 핵합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11.19), “제네바 핵합의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1993년 3월 이전에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핵의혹 시설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아들여야 하고, 핵확산금지(NPT)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끝내 사찰을 거부하고, 핵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UN안보리로 회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매들린 올브라이트 장관은 하비에르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해왔다”고 밝히면서 미·북관계가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하였다(11.20).

차 4차회담 본회담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훨씬 확대·진전되고,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공존공영, 그리고 남북간 교류·화해·협력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전망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미·북접촉의 성과는 미국의 대북한정책 전환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의회는 클린턴행정부의 핵투명성과 미사일 개발 중지를 위한 대북한 외교노력을 예의주시해왔다. 미국은 의회내에 보수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네바 핵합의의 유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핵합의의 전면파기와 경수로사업의 전면중단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대북신뢰와 감정이 악화되어 있으며, 북한핵개발 저지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사찰 문제를 놓고 이라크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볼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결코 가설이 아님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한다.³⁰⁾ 우리 정부는 실로 만반의 외교적·안보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새로운 북한핵 위기는 한·미양국의 대북정책 노선설정에

30) 많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한승주, “제2의 북핵위기를 경계한다,” 「중앙일보」, 1998.9.23.

있어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그들이 약속한 제네바 핵합의의 사항들—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으로 보상받게된—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또 다른 보상, 곧 “위기를 통한 보상(compensation for crisis)”을 원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는 매우 ‘나쁜 버릇’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전략적인 벼랑의교(brinkmanship)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³¹⁾ 차라리 대북한 경제제재의 해제를 통해 국제사회와 자본주의체제에 좀더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을 자각케하여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³²⁾

한편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미, 중, 일, 러)은 제네바 핵합의에 입각한 경수로사업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식하고 있어서, 제네바합의 이전상태로 돌아가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국이 경수로사업의 중단이 초래할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의견대립과 사업의 정체가 있더라도, 사업자체의 전면 중단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1998년 8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대북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북·일관계가 크게 냉각된 상태이다. 일체의 대북지원이 동결되어 있고, 양국간 수교협상도 침체되어 있다. 북·일관계가 호전되기 위하여서는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의 자세변화가 요구된다.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북한의 정책변화가 있을 때 일본정부의

31) Ralph A. Cossa, “US-N.Korea Talks: Time to Break Bad Habits,” *The Korea Times*, 1998.12.4.

32)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견해를 수차례 걸쳐 표명했으며, Cossa의 앞의 글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대국민 설득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도 현재의 핵개발 상태와 진정한 그들의 의도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핵엄포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핵게임이 아니라 경제난 및 식량난 해결이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 경수로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미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나 비정부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이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북한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³³⁾

33) 미국의 경우, 정부가 금년에 WFP를 통해 지원키로 한 20만톤의 식량 이외에 월드 비전 등 NGO의 지원 규모가 1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정 분위기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지난 11월 16일 카트만 투사의 방북에 맞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대북 잉여 밀지원이 11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핵의혹 시설과 관계없이 지난 제3차 4자회담 본회담 및 미사일회담 재개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하다.

Ⅲ. 경수로사업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가.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

<안보·외교적 측면>

북한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격심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특히 남한의 중·러와의 수교로 인한—등으로 직면하게 된 체제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의 증대되는 국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안보에 대한 보장을 얻으려 시도해왔다. 즉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정치·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파탄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한편, 미·북 핵협상을 체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NPT탈퇴 선언 이후 열리게 된 미·북 제2단계 고위급 회담(1993.7;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정치협상으로 변질시켰으며, 제3단계 회담(1994.7; 베를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을 연계·타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핵개발을 활용한 북한의 대미 벼랑외교는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은 두 개의 경수로건설을 약속받고, 경수로 작동 때까지 대용(代用) 에너지 원(源)으로서 중유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다. 미·북 핵합의는 협상과정 기간 중 진전되어

은 양국간 쌍무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공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핵합의는 미국에 대한 북한 안보외교의 커다란 성과를 의미하였다. 북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은 이미 1993년 6월의 공동발표(joint statement)에 나타난 바 있었다.³⁴⁾

제네바 핵합의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경수로사업을 대미관계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며, 오랫동안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따라서 한국표준형의 공급과 한국 전력공사가 주계약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논란이 되었던 경수로 노형 및 주계약자 문제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사실상 핵심쟁점이 되었다. 제네바 합의 서명 이후 경수로 공급협정을 6개월내에 체결하도록 한 약속에 따라 미·북 전문가회의가 1994년 1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대북공급이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독 문은 당근'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하면서 경수로사업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상의 많은 우여곡절과 난항 끝에 1995년 6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미·북 준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설득으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한국표준형 원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수용함으로써 경수로 노형선정과 주계약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종료되었다.³⁵⁾

34) 공동발표문은 북한의 주권(sovereignty)에 대한 미국의 존중, 내정불간섭, 핵무기를 포함하는 무력불사용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35) 미국은 한국이 비한국형 원자로에 대해 절대로 재정부담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마침내 "... 한국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경수로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설계에 의한 것이므로, ... 경수로형을 미국설계와 기술의 계량형으로 명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설계와 기술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는데 대해선 개의치 않으며, 우리가 노형을 확정한 이상 주계약자는 무역하는 실무적인 문제로서 미국이 KEDO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했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형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에게 미치게 될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경수로를 건설하는 경우 수많은 한국인이 북한을 왕래하게 되고, 또한 남북한 근로자들간의 빈번한 접촉은 북한체제 존립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 한국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는 중국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북한 당국은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체제안전에 덜 위협이 되는 미국형으로 건설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실리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형을 수용하였으면서도 한국형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인 KEDO가 북한과 직접 접촉케 함으로써 한국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하려 하였다.

북한은 아직도 공식석상에서는 미국을 경수로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석상에서는 한국의 실질적 역할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특히 경수로 협상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경수로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외형적 인식은 큰 변화가 없으나,

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자는 입장이다 . . . ”라고 하는 한국형 경수로와 주계약자의 수용의사를 밝혔다. 북한측 협상대표, 6월 12일 기자회견; 한편 미국은 미·북 공동발표문에 ‘한국형 경수로’ 구절이 삽입되는 않을 것이므로, 한국형경수로 선정을 보장하는 클린턴 미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6월 13일 오전 9시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가 청와대에서 발표되고, 오후 5시에는 KEDO집행이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대북 지원 경수로형은 한국형이 될 것이며, 주계약자로 한국전력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6시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이 발표됨으로써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국면은 일단락되었다. 전봉근, 「통일안보정책 결정체제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성남: 세종연구소, 1998), pp. 47~50, 참조.

실질적으로는 이를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협조도 대체적으로 원할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수로정책>

북한이 미·북 핵협상에서 핵동결 대가로 경수로건설을 요청하였을 때, 전기생산까지 10년여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당시 북한의 기술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수로 건설을 북한이 요구한 데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의구심과 해석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원자력 획득 노력은 상당히 역사가 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83년 IAEA총회에서 북한대표는 북한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의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인력을 양성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1989년 IAEA총회에서는 소련으로부터 440MWe급 4기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1000MWe급 경수로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경수로 도입이 좌절되고 주체경제원칙에 입각한 흑연감속로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와중에서 핵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전력수요 때문이라면 화력발전소 건설이 용이한 방법일텐데 북한은 왜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일까?

우선, 미·북간 합의를 통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가 실시되면 '핵 모호성(nuclear ambiguity)'에 기초한 핵카드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건설기간이 장기간인 경수로건설을 반대급부로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수로건설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원자력 기술자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수로사업이 건설에만 10년이 걸리고 주요 핵심부품의 도입에 최소한 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동안 북한은 이미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

로토늄을 비밀 지하기지에서 가공하여 원시적이지만 작동 가능한 핵 폭탄을 제조함으로써 외교·안보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는지도 모른다. 셋째는,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미·북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 각종 경제지원을 획득하려는 외교전략일 수도 있다.³⁶⁾ 아마도 북한의 경수로 도입결정은 이상과 같은 많은 고려를 종합하여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한다. 최근 영변 인근 지하시설의 핵의혹도 이러한 북한의 경수로전략과 정책에 바탕을 둔 원려(遠慮)의 결과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후의 북한의 태도>

경수로 공급협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에서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무엇보다도 체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반면에 KEDO와 한국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교류와 접촉점을 확대하려 노력하였고, 북한은 이에 최대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협상에서 북한은 당초 KEDO를 주도하는 미국에게만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면제부여를 고집하였으나, 협상결과 KEDO는 UN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부여받고, KEDO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에게도 외교관 수준의 특권·면제가 부여되었으며, 영사보호지역도 사실상 KEDO인원이 활동하는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다.

‘통행의정서’ 협상에서 북한은 무엇보다도 남북 직항로의 개설을

36) 위의 책, 참조.

거부하였으나, 협상결과 사업초기에는 북경—선덕항로를 이용하되, 남북직항로는 기초굴착공사 개시 이전에 협의토록 절충하였다. 해상로에 있어서 북한은 물자수송만 해상로를 이용하고 인원 수송은 항공로를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는 바, 이는 안보를 중시하는 군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과, 해상로를 통한 KEDO인원 및 물자수송은 허용하되, 바지선로는 KEDO의 주장보다 거리가 먼 지점(동해기점 153마일)으로 하며, 일반선박의 해로는 공로(동해기점 200마일)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사용항만은 양화항만을 이용하되, 양화항 이용이 불가능할시 북한이 추가적인 항구를 지정하도록 절충하였다.

‘통신의정서’ 협상에서 북한은 KEDO에 의한 독자적인 위성통신 보유를 부지착공후 24개월 이후부터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무선통신은 간첩활동이 우려된다며 불허하였으나, 24개월 이후부터 사업부지내 통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지의정서’ 협상에서는 KEDO측이 부지를 일괄 인수하되, 공사중 KEDO측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북한이 경작·사용토록 하였다. 한편 북한이 설치를 주장한 검문소에 대하여는 협상결과 북한의 부지의 검문소 설치에 수용하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KEDO인원 및 물자는 통행의정서상 합의된 통로와 부지간 연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의정서’ 협상에서 KEDO는 북한근로자 임금을 월 80달러 수준으로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월 200~300 달러 수준을 요구하였다. 결국 협상결과 임금수준은 북한내 합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미숙련공은 월 110달러로 산정하되, 숙련공은 생산성, 기술숙련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37)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5호 (1998), pp. 67~68.

후속의정서 협상은 경수로공급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협상과정에서 경수로사업 진전에 따른 북한의 체제안보상의 우려가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측은 체제유지와 안전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외화획득의 필요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경수로사업을 통해 남북관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많은 성과, 특히 통행·통신·통상 등의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는 바, 이는 KEDO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한 연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 경수로사업이 주는 경험과 교훈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북한이 체제고수를 위해 처음에는 완강하게 접촉을 거부하지만, 북한측이 당면한 현실적 난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되,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대북관계를 추구할 경우, 남북교류확대의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경분리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어 남북 양측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예상외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수로의 건설과 중유 제공이라는 명백한 북한에의 보상 제공과 남북한 직접 거래가 아닌 국제기구(KEDO)를 통한 대북한 협상 및 거래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중속 또는 흡수통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8월 19일의 경수로 부지준비공사의 착공은 경수로사

업에 대해 북한이 가져왔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총공사비 재원분담 협상이 수개월 지연됨으로 인해서 본공사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자체에 의구심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핵 재개발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 북한의 대응: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간의 딜레마

1998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격변의 한 해였다. 남한은 민주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다시 한번 확립하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를 천명하였다.³⁸⁾ 북한은 1998년 4월 김정일서한을 통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5대원칙’을 제시하며 남북화해 제스처를 취한 바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³⁹⁾ 북한은 베이징 비료회담 이후 당국간 대화는 기피하면서도 민간부문에서의 남북간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998년 8~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은 내부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로켓발사 등 도전적 행위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북한은 ①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통한 북한권력 완전장악, ②헌법개정을 통한 시장제도 요소의

38)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화해·협력의 실천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한 3대원칙으로 ①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흡수통일 배제 ③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제시하였다.

39) 북한 노동당 총비서 김정일은 1998년 4월 18일,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서한을 통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 5대원칙’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안기부의 철폐를 주장하여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분적 도입, ③내각개편으로 대내경제운용에 있어 내각권한 강화, ④새로운 국가지도 지침으로서의 「강성대국」론 제창으로 주민동원 및 단결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 주변국들(특히 한·미·일 3국)을 경악시킨 바 있으며, 또 다시 영변 인근에 대규모 지하공사를 강행하여 핵의혹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수년간 유지되어 온 핵합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남한의 IMF 경제위기와 대북 포용정책을 추구하는 신정부의 출범, 그리고 북한내부 체제위기상황의 가속화 등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북한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체제변화 및 체제와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정책설정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딜레마는 제한적이나마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과 군부의 증가된 영향력에 기초한 강경노선 사이에서 정책혼선과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동안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북한이 취한 일련의 개방조치를 통해 국내외 민간인의 대북한 왕래와 접촉 및 교류가 빈번하여졌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 저변에는 상당한 정도의 민심이탈과 사회통제 이완 및 시장경제적 요소가 증대하고 있어, 북한의 이러한 체제유지-경제개방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경제난 타개와 외화획득을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도 외부사조 침습을 우려해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은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그룹과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여타의 남북경협사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까다로운 세칙을 제시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내부적으로 과거회귀적 기존의 경제노선을 고수하려는

것은⁴⁰⁾ 바로 이러한 북한의 고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북한은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매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데올로기 문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 유입에 관한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변화를 가로막는 최대 요소는 체제유지에 대한 북한의 집착과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경수로부지 일대를 특별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1996년초 경에 금호리 등 9개리를 신포시에서 독립시켜 함경남도 직속의 금호특별행정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금호지구에 대한 철조망 울타리를 1997년 8월 이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금호지구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경수로업무 전담부서로서 「경수로대상사업국」을 설치하여 경수로업무를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특히, 외부 인원과 접촉이 빈번한 청소원, 간호원, 취사원 등의 분야에서는 KEDO사업에로의 북한인력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또한 통신장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측 작업인력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분야별 감시요원을 투입한다든가, 작업 종료후 “총화”라는 이름하에 이데올로기 재교육에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예이다.

40)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10기 1차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①기업독립채산제 허용, ②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③경제특구내 기업창설 운영 장려, ④과학분야의 특허권 보장, ⑤거주여행의 자유보장 등 일련의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여 경제정책 변화가능성과 관련, 주목을 끈 바 있으나, 이어 나타난 9월 17일의 당기관지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를 통해 과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과 「자력갱생」등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이 논설은 개혁·개방을 “사당발린 독약”이라고 거부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이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 기본노선임을 밝힌 바 있다. 「민주평통」, 1998.11.8.

동시에 북한은 그들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여 경제적 실리추구에도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의정서 및 개별계약 협상시 북측 근로자 임금 수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금호지구에 음식점을 설치하여 외화벌이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식당 등 개인상점의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채소, 경유 등 각종 생활물자 가운데 외화벌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수로부지와 선덕공항공간 도로포장 공사에 남한측이 아스팔트 피치를 제공하면, 북한측이 모든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제의한 것 등은 북한이 경제적 실리추구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요컨대 경수로 건설사업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는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및 전력난 등으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김정일체제를 손상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노동자들의 외부접촉이나, 대외관계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북한체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영향

북핵동결과 경수로 건설, 그리고 그 외의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의 많은 산물들—외교관계 진전, 경제체제 완화 등—은 북한의 향후 핵정책과 대미정책 및 대남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최근 대북한 완화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조건없는 식량지원 등이 북한 내부의 온건파, 특히 19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유사한 체제개혁을 추구하는 개혁파들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무역, 투자 및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폐쇄된 경제와 사회를 외부 접촉과 영향에 불

가피하게 개방토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⁴¹⁾ 아직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기도하고 있으며, 특히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동결 수락 동기가 극도의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의지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하되, 체제유지 문제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수로사업 추진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신뢰 조성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1997년 8월의 부지준비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준비과정과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현장공사 진행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경수로사업 완공시까지 연인원 1천여만명과 1백만톤에 이르는 장비·자재가 동원되고, 공사 절정기에는 매일 1만여명에 달하는 남북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부지 준비공사에 북한 근로자 약 250명(북측 100명)이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수천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함께 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약 10년간에 걸쳐 수만명의 인력, 수백만톤의 기자재와 장비가 동원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육상, 해상, 공중 등 남북한 통로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회적인 해·공로의 통행·

41) 신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지하 핵의혹시설 공사가 계속되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사회 일각의 보수계층이 우려를 보낸 것이 사실이다.

통신을 판문점 통과, 판문점 기존 회선 활용, 서울—원산간 철도 연결, 속초—나진간 항로 개설 등 남북간 직접 연결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는 분단 반세기동안 누적되어 온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족공동발전의 장을 열어 나가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수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북한사회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통합’ 실험장으로서, 남북관계에 매우 의미깊은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경수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한 근로자간 접촉을 통해서 남한의 실상,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이 정확히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경수로공사를 통해서 현대화된 장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KEDO와 남한 노동자가 거주하는 부지 주거환경이 목격됨에 따라 북한의 국내 환경과 비교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 외에, 영양있고 양이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은 이후 북측 근로자들의 태도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업복, 작업도구 및 기타 의류와 생필품의 제공을 통해 남북한간 생활수준의 비교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경수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식사 제공, 기술 이전, 달러 벌이 등에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체제의 근본 문제에 관하여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아직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KEDO와의 업무처리, 물자하역 등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북한근로자 100여명은 3~4개월 마다 30%씩 교체되고 있다. 남북한 근

로자들은 정치 등 민감한 사안을 빼고 가족관계나 스포츠 같은 가벼운 얘기는 자유롭게 나누고 있으며, 금호지구에는 축구, 야구장에 자그마한 골프장도 마련되어있다.

부지준비공사 기간중 남북한 근로자의 공동작업은 수십년간 남북한 체제가 가져 온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10월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정일 사진이 찢어져 버려짐으로써 일어난 '노동신문 훼손사건'은 남북한의 체제·이념·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전형적 예라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KEDO와 북한간 상호 팽팽히 맞서다가 유아무야로 끝남으로써, 양측간 상호이해에 입각하여 추진 중인 경수로사업의 지속성을 저해하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겠으며, 상호이해와 적응의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근로자들과의 교류·접촉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되며, 작업과정에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경수로 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돌변과 국내여론의 악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노동신문 사건 이후 북측이 이념문제로 두세 차례 더 시비를 해왔지만 1998년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⁴²⁾

42) 존 F. 후그(KEDO 금호사무소 대표) 인터뷰, 「중앙일보」, 1998.6.26.

IV. 남북관계 개선방안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전략은 북한핵의 동결·해체가 7,000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인 만큼, 한반도 안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북한변화 유도를 위하여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루-트로 활용하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전략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 정책과제

가. 한·미의 대북한 포용정책 공조

미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안보전략의 차원에서 대북한 포용정책을 추진,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이룩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미·북관계의 분수령이라 할 제네바 핵합의의 핵심은 바로 경수로 지원사업으로서, 한·미양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성패 여부는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 여부에 달려있고, 이는 또한 경수로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과 군사적 공세에 대해 군사적 억지 또는 남북한 무력균형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계기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제 경수로 건설과 더불어 북한

핵의 동결 확보는 이 목적의 실현에 한 걸음 기여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는 동북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성공적인 장치임을 입증하였다. 경수로건설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핵비확산체제는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은 동북아국가들이 지금까지 실천해보지 못한 대규모의 신뢰구축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아시아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이며, 매우 심각한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 내지 분해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바로 북한이 수십년간 스스로 선택하여 지속시켜 온 고립정책의 결과이며, 현재 북한의 지도력은 합리성을 상실한 채 일종의 ‘정신적 방황’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우선 북한의 자살적 대남도발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경제의 완전한 붕괴와 몰락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목표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정한 양의 국제적 식량지원을 지지해왔으며,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기 위한 국제조직(KEDO)을 지원하여 온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에서 발생할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곧 기아 및 난민사태(“humanitarian-refugee crisis”)를 군사안보에 버금가는 한반도의 안보위기 상황으로 간주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⁴³⁾ 이제 북한핵의 동결과 계속되는 미·북간 쌍무관계의 진전은 북한이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원조의 최대 수혜자가 되게 할 전망이다. 물론 아직도 미국내 정책입안자들 사이

43) 미국방부 아태 차관보 캠벨(Kurt Campbell) 증언 (1997. 7. 11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분과 소위원회 청문회) 참조.

에서는—특히 의회 일각—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여 북한핵을 동결하려는 미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⁴⁾ 특히 1998년 8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대규모 지하공사를 벌여 핵개발 의혹을 사게 된 이후에는 미의회내 보수여론이 급부상하여 대북 강경책으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⁴⁵⁾ 문제는 북한이 진정 핵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핵과 미사일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대미접촉 및 줄다리기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인지에 귀착된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여 경수로사업이 지속될 경우에도 붕괴의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북한경제가 과연 그토록 정교하고 복잡한 핵발전 원자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도 상당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상대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양국 정부가 상호 현안 이슈에 관해 진전이 있을 경우 외교적 정상화를 이룩한다고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기술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나, 북한이 최종 결심을 미루고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외교정상화에 관한 한, 한반도의 재래(비핵)군사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휴전선 북방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중무장된 군사력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의 제3국으로의 수출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다.

44) Charles Kartman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Japan and Korea: Key US Security Partners in Northeast Asia," *Electronic Journal* (1998. 2) 참조.

45) 미국은 북한의 영변 인근, 특히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투명성 확보가 제네바 핵합의의 필수요건임을 강조하며, 북한핵 문제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미국무성 대변인 성명('98.11.10)을 시작으로 거듭 밝히고 있다.

제네바 핵합의는 1994년 10월 2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미·북양측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텔레컴유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전쟁 당시 트루만 행정부와 의회가 설정한 대북한 경제봉쇄를 클린턴행정부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1995년 1월 몇 가지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곧 바로 미·북간 경제 내지 기업들 거래에 단기적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미·북 수교 등을 북한에 공여하는 일괄타결식 해결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공조는 한반도 안보유지의 근간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대북역지 및 봉쇄,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붕괴 대비, 북한 연착륙 유도 등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해왔는 바, 경수로 사업에 있어서도 한·미양국의 정책공조가 동 사업의 성패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바, 경수로 사업비용 및 중유비용 분담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북한정세에 대한 양국공동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북한체제 장래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북한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 영변 북방 금창리의 지하시설 의혹에 대하여 양국의 의견조율은 이후 북한에 대한 양국의 정책공조에 커다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의도에 관해 민감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반면, 한국정부는 대북 포

용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기초하에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북 경협확대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양국간 이러한 미묘한 입장차이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⁶⁾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과 경수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동향과 미·북 쌍무관계 진전상황(경제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개설 및 핵·미사일 협상 등)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국 안보공조에 기초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북한의 핵동결 이행

제네바 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된 시설들’을 핵합의(1994.10.21) 이후 1개월내에 동결하고 그 동결 여부를 IAEA에 의하여 확인받도록 되었다. 여기서 ‘관련시설’에는 플루토늄 재처리 플랜트가 포함된다. 또한 북한은 50MWe와 200MWe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고 5MWe짜리 원자로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4년 5월 5MWe원자로로부터 나온 연료봉을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미국과 협조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1994년 11월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

46) 찰스 카트만(Charles Kartman) 한반도평화 전담대사의 방북 이후 서울 기자회견에서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강력한(compelling)” 증거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외무장관은 “결정적(conclusive)”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여 주목되기도 했으나, 한·미정상회담(‘98.11.21)을 통해 이러한 미묘한 의견차이는 충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을 공표하였고, IAEA는 이에 대한 최초의 사찰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⁴⁷⁾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IAEA의 이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북핵 동결에 대한 미국과 IAEA 간의 견해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핵합의를 이룩함에 있어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시설을 당장 없애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의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확실하게 동결(freeze)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변에 있는 50MWe와 200MWe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만약 50MWe와 200MWe 원자로가 가동된다면, 연간 약 3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최근 핵폭탄을 수출할 수단을 확보하고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의 영토 인근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되자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1998.8.31) 이후 이러한 우려와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북한 지하핵의혹 시설의 사찰과 투명성 확보가 경수로사업 지속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약 8,000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이 1996년 4월부터 시작되어 중간에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다시 재개되어 1999년초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의 제3

47) 그러나 1995년 2월 IAEA 관리는 북한이 IAEA 사찰요원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하여 충분한 사찰을 행할 수 없게 하였으며,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사찰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IAEA는 북핵 사찰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려 함에 따라, 북핵의 완전한 해체보다는 북핵의 동결에 관심을 갖는 미국과의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국으로의 이전이 추진될 것이다. 다만 경수로 핵심부품이 제공되는 시기(주계약 체결 후 약 4년)에 북한의 핵동결과 해체를 확인하기 위한 IAEA의 특별사찰을 포함한 핵안전조치협정의 완전이행 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또한 경수로 2기가 완성되기 이전에 북한은 제반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여야 한다.

다. KEDO의 틀을 활용한 남북관계 증진방안 모색

KEDO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추구가 기존의 남북관계와 다른 점은, 상호불신으로 협상의 성공이나 합의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남북관계에 KEDO가 다자간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남북 양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⁴⁸⁾ 이는 KEDO체제를 통해 참여국가간 상호접촉의 구도가 경제적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추구관계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⁴⁹⁾ 특히 이러한 다자주의적 국제관계의 율타리 속에서도 남북이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수로사업은 형식상으로는 KEDO-북한간의 관계로 포장되었으되, 한국 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하기로 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등장함으로써 실제로는 남북관계 중심으로 화(化)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는 과거 6·25이후 휴전협상이나 해방으로부터 분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협상과정에서 남북이 거의 배제되고 강대국 중심이 되었었던 경우와 대조되는 점이다.

48) Yong-Ho Kim, "KEDO: Major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Korean Economic Institute and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 Economy*, Vol. 14 (1998), pp. 127~8.

49) 전성훈,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pp. 70~74.

다시 말하면, 한반도 주변 관련 강대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남북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반도 문제 해결에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는 무엇보다도 불신과 반목으로 일관된 남북 양자관계에 국제기구나 미국과 같은 제3의 강대국이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여 증개할 수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북한에 일정한 물질 보상을 제공하고 잇슈를 다양화시킨 것도 경수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아닌가 한다. 이는 남북 양측에게 민감한 한반도 평화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4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요약하면,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다자주의적 틀을 활용한 남북 양자관계의 개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주변 강대국의 협력을 유도하되, 남북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② 경수로사업에서처럼 북한에 일정한 물질적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③ 군사·안보문제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력, 식량, 비료 등과 같은 실제적 잇슈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적 거래(comprehensive 또는 package solution)가 유용하다; ④ 국제기구나 제3의 공정한 강대국이 북한의 신뢰를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⑤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가이익보다는 남북한 문제에 신실(信實)해야 하고, 사실상 공정한 어느 강대국(국제정치의 역학 구조상 UN이나 미국)이 있어 주변국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직접거래는 1995년 15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동안 우발적인 사고를 통제할 틀이나 장치가 결여하였고, 그 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도리어 남북간 불

신을 증대(escalate)시키는 우(愚)를 범하여 오곤 했다. 이에 비해 최근의 UNDP나 WF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식량지원의 경우를 보면, 이들 국제기구는 수차에 걸친 지속적인 대북한 식량지원 사례를 통해 초기의 북한의 의혹과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신뢰를 획득해 옴으로써 북한 개방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제기구에 대한 과거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앞잡이” 인식으로부터 실로 커다란 변화를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수로사업이 국제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상호 보완하여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진방안

가.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추진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민적합의 도출>

1998년 11월 9일 KEDO이사회에서 「대북 경수로 재원분담 결의안」이 채택되어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수로 공사비의 추가발생 비용은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비 지출에 있어 초기단계에는 타회원국(미국·일본 측)이 사업비를 우선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2~3년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 진전과 병행한 의정서 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므로써 기존 합의사항의 보완·발전을 위한 실무협의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경수로사업의 당위성과,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재정분담의 불가피성, 그리고 사업비 지출이 7~10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⁵⁰⁾ 일단 재정분담이 확정되면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국회동의 여부는 경수로 사업비의 조달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바, 예산지출을 통해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경수로사업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결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수로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⁵¹⁾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강구>

아울러 국민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검토가 가능한 경수로사업비 조달방안으로서는 ①재정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서 조세수입 활용, 정부보유재산 매각, 국채발행, 목적세 신설 등을 들 수 있고, ②한전이 조달 책임을 지고 재정에서 차입비용(이자비용)을 보전(補填)해 주는 방법,

50) 국민들의 70% 이상이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비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998.2.20 대통령직 인수위 여론조사). 그러나 경수로 건설 문제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73.5%가 '국제적 약속이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된 바 있다(1998.2.25. 통일원 여론조사).

51)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는 경수로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KEDO 운영 기금 1/3만 포함되었다.

그리고 ③전기요금에 부과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조달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 부담 완화, 안정적 재원 조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수로사업의 성격상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재의 재정평편 등을 감안할 때, 전액 재정부담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국공채 발행은 구조조정 및 실업재원 조달과 관련한 채권이 다수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발행시 시장에서 소화여부가 불확실하고, 또한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전에 의한 국내의 차입은 자칫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도산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향후 외자유치 및 민영화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별(목적)세 신설은 세계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목적세 축소 및 폐지의 기본방침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전기료 부과금」안으로서, 전기료에 2~4%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실상 전기료의 인상을 의미하며(매월 1가구당 5백원 증가의 효과), 물가상승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몇가지 점에서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안(案)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수로사업 비용의 통일·안보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전기를 모두 사용하는 전국민이 다같이 부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전력수요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용의 적기(適期)조달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셋째, 경수로사업은 한전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전력사업이므로 전력사업과 연계하는 재원조성 방안이 바람직하다. 즉 전기요금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전자체의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구조개편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이 방안은 국민에 부담을 주

는 일로서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법률개정으로 부과근거를 마련할 경우,⁵²⁾ 국회의결과정을 통해서 국민적합의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⁵³⁾

<경수로사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사업비(32억 2천만 달러)의 상당부분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나 하청업체를 통해 인건비, 설비비,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다시 환류되어 고용창출 및 내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수로사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생산 발생효과는 4조 64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096억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는 54,38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⁵⁴⁾

또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수로건설 기간 중 분산기여하게 되며, 또 외환소요가 거의 없는 원화(貨)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외환사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사업비는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완공후 북한이 3년 거치후 17년간 분할상환하기로 되어있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독자성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음으로써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수로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대국

52) '부과금'의 법률적 근거는 '국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라는 점이다.
 53) 이 방안은 우리 전기료가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전기료 부담을 100으로 할 때, 일본 314, 미국 150, 프랑스 168, 영국 210, 대만 146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일보」, 1998.12.4.
 54)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결과(1998.10).

민, 대국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나. 남북 교류·접촉 확대를 위한 현장관리 방안

경수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현장에서의 남북 교류·접촉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지구는 대규모의 남북한 근로자들이(본공사시 1만여명 공동작업 참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남북간 인적교류·접촉의 증대와 상호 이질감의 해소를 위한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바탕위에서 경수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인적교류·접촉을 추진하되, 본공사 진전 시는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소극적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남북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방향에서 남북 근로자간 교류·접촉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근로자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운동경기 및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남북 기업간 실무 협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EDO인원이 부지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범위 확대를 위한 대북협의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한다. 식사(간식), 작업소도구, 담배, 의약품 등 북측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시혜방안을 개발하고, 북측 근로자들로 하여금 장비, 차량 등의 책임관리를 유도하며,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넷째, 남북 인적교류·접촉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현장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자 휴가 귀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착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 론

대북 경수로사업은 북한핵을 동결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려는 한·미양국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경제난 극복을 통해 체제생존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미외교의 산물이다. 경수로사업은 북한정세의 극도의 불안정성 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과 대남도발의 위험을 방지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경수로사업은 핵확산 방지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서는 북한핵을 동결·해체하여 국가안보의 최대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최근의 북한 영변 인근의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을 제외한다면 북한의 핵동결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어 온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수년동안 KEDO를 통한 경수로 건설사업은 동북아에서 핵확산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장치임이 입증되었다.

경수로사업의 특징은 북한의 핵개발을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일정한 물적 보상을 공여하여, 경수로건설과 북한핵 동결이라는 상호이익 거래(plus-sum game)를 통해 일종의 '홍정체제'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상 서방세계의 어느 누구도 북한과 타협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었고, 대북한 관계설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KEDO를 통한 경수로사업의 성공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북한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이며, 매우 심각한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변화 내지 분해

의 과정 중에 있고, 지도층의 세계인식도 지극히 비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갈구하고 있으나, 대외관계의 확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야기될 체제혼란과 체제외해 가능성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경제지원 욕구와 체제혼란 우려간의 딜레마를 다자간(多者間) 협력의 틀인 KEDO의 우회적 메카니즘을 통해 해결하였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요컨대, 한국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함으로써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미국, 일본, EU 등과 함께 KEDO의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남북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대남 의존도 내지는 흡수통일애의 두려움을 감소시킨 것,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등장하여 실질적 공사를 담당하지만, 형식상으로는 KEDO-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 등이 바로 북한의 딜레마와 남북관계의 난제를 해결한 경수로사업의 독특한 방식인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당국자간 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이 체제고수를 위해 처음에는 완강하게 접촉을 거부하지만, 북한이 당면한 현실적 난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대북관계를 추구할 경우, 남북교류확대의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수로사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경분리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어 남북양측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된다면 예상외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수로의 건설과 중유 제공이라는 명백한 북한에의 보상 제공과 남북한 직

접거래가 아닌 국제기구(KEDO)를 통한 대북한 협상 및 거래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종속 또는 흡수통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상호 보완하여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네바 핵합의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의 대북공급이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독 물은 당근’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하면서 경수로사업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거부반응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즉 한국형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에게 미치게 될 정치·경제·사회적인 영향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한국형 경수로를 건설하는 경우 수많은 한국인이 북한을 왕래하게 되고, 그로 인한 남북한 근로자들간의 빈번한 접촉은 북한체제 존립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 한국에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는 중국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북한 당국은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은 경제적 실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형을 수용하였으면서도 한국형임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인 KEDO가 북한과 직접 접촉토록 하여 한국의 개입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경수로공급협정 이후 후속의정서 등의 협상과정과 1997년 8월의 부지준비공사 착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현장공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범위 확대를 강력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와 관련된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 물결 유입에 관

한 문제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변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가로막는 최대 요소는 체제유지에 대한 북한의 집착과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지도부의 체제존존 노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경수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규모의 인적·물적 교류와 남북한 근로자의 공동작업 기회는 장기간에 걸쳐 북한사회에 대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수로사업 현장은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통합' 실험장으로서, 남북관계에 매우 의미깊은 촉매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수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신뢰 조성에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체제의 근본문제에 관하여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남북한 근로자간 접촉을 통해서 남한의 실상, 특히 남한의 경제적 우월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성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현대화된 장비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KEDO와 남한 노동자의 의·식·주 환경이 목격됨에 따라 북한의 국내 환경과 비교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근로자의 공동작업은 수십년간 남북한 체제가 가져온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도 되고 있어 상호이해와 적응의 오랜 과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노동신문 사건'은 그 일례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하겠으며, 북한 근로자들과의 교류·접촉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1998년 8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영변 인근의 대규모 지하 핵의혹 시설 공사로 북한핵 문제는 한반도 국제정치의 새로운

잇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수로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1994년의 핵합의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의 핵동결에 있는 만큼,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특히 영변 인근 지하 핵의혹 시설) 제네바 핵합의, 곧 경수로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핵 투명성 확보와 미사일 개발 중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핵·미사일을 외교적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미·북 양측 간 지속적인 접촉과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경수로사업은 이러한 미·북접촉의 성과에 좌우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다. 미·북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경수로사업은 보다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경분리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훨씬 확대·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 경수로사업의 전도는 불투명하며, 이러한 결과는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의회내에 보수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네바 핵합의의 전면파기와 경수로사업의 전면중단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양국의 정책공조는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정세에 대한 정보공유와 북한체제 장래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북한 영변 북방 금창리의 지하시설 의혹에 대한 양국의 의견조율과 정책공조는 향후 한·미공조에 커다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수로사업의 재원분담 결의안이 채택되어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수로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

보정세를 고려한 경수로사업의 당위성과, ‘중심적 역할’에 걸맞는 재정분담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수로 분담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내 경제에 환류되어 고용창출 및 내수증대에 기여하게 되고, 사업비용이 경수로건설 기간 중 분산 지출되며, 원화로 부담하여 외환사정의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경수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현장에서의 남북 교류·접촉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금호지구에는 대규모의 남북한 근로자들이(본공사시 1만여명 공동작업 참여)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됨으로, 남북한 인적 교류·접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경수로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본공사 진전시는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소극적 현장관리 차원을 넘어 남북화합의 장을 열어가는 방향에서 남북 근로자간 교류·접촉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근로자간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북한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록> 경수로사업 추진일지

1993. 3. 12 북한, NPT탈퇴 선언
1993. 5. 11 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채택
 - 북한의 NPT탈퇴 철회와 핵안전협정 이행 촉구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행에 관한 남북한 대화 개시 촉구
1993. 6. 2~11 제1단계 미·북 고위급회담(뉴욕): 북한, NPT탈퇴 잠정 유보
1993. 7.14~19 제2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제네바)
 - 북한, IAEA와 사찰협의 재개수용
 - 미국, 북한에 경수로지원 시사
1994. 7. 8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 개시(제네바)
 김일성 사망(7.9발표)
1994. 8. 15 김영삼대통령, 8·15경축사에서 경수로지원 용의 천명
 -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한다면, 경수로 등 평화적 에너지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이것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제네바)
 -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해체
 - 1,000MWe급 경수로 2기 제공
 - 대체에너지(중유) 제공
 - 미·북간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 재개
 * 6개월내에 공급협정을 체결키로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미·북 경수로 전문가회의 개최: 북경회의(94.11.30~12.2), 베를린회의(95.1.28~2.1, 3.25~27. 4.12~13, 4.18~20)

- 1995. 1. 23 정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 1995. 3. 9 한·미·일, KEDO설립협정 서명 (뉴욕)
- 1995. 6. 13 KEDO집행이사회 결의 (서울)
 - 대북지원 원자로의 노형은 한국표준형으로 결정
 - 주계약자는 한전으로 내정
- 1995. 6. 13 미·북 준고위급 회담, 공동언론 발표 (쿠알라룸프르 5.20~6.13)
 - KEDO가 노형 및 주계약자를 선정
 - KEDO와 북한간 공급협정 체결키로 합의
- 1995. 8. 15 KEDO, 신포지역 부지조사 개시
- 1995. 9. 11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상 개시(쿠알라룸프르)
- 1995. 12. 15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전문, 18조, 4부속서)
 - 공급범위: KSNP LWR2기, 원전건설에 필수적인 사항
 - 상환조건: 각 호기별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무이자)
 - 한국표준형 관련사항: KSNP적용 기술기준, 2단계 인허가절차 등
 - 사업진행에 긴요한 사항: 통행, 통신, 사업자간 접촉 보장 등
 - 핵활동 관련 의무사항: 제네바합의를 국제법적 의무로 재확인
- 1996. 3. 19 한국전력공사-KEDO간 주계약지정 합의문 채택
- 1996. 4. 8 KEDO-북한간 후속의정서 협상 개시

1996. 7. 11 KEDO-북한간 「특권·면제」, 「통행」, 「통신」의정서 서명·발효
1997. 1. 8 KEDO-북한간 「부지인수」 및 「서비스이용」의정서 서명·발효
1997. 6. 24 KEDO-북한간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서명·발효
1997. 7. 2 KEDO-북한간 각종 절차 등 19개 합의서 서명
1997. 7. 24 부지-남한간 우편서비스 개시
1997. 7. 28 KEDO 금호사무소 개설
- KEDO인원에 대한 영사보호 기능 수행 및 KEDO와 북한간 연락업무 담당
- 우리측 대표 2명 상주 (미국 2, 일본 1)
1997. 8. 4 부지-남한간 통신 개통
1997. 8. 19 부지준비공사 착공식 개최
1997. 9. 19 EU, KEDO 가입
1997. 11. 4 KEDO-북한간 「품질보장」의정서 협상 개시
1997. 11. 25 경수로 총사업비 잠정 확정 및 경수로 재원분담 협상 개시
1997. 12. 12 외환은행 금호출장소 개소
1998. 7. 28 「대북경수로 재원분담 결의안」 잠정합의
1998. 8. 31 북한, 다단계 로켓 발사 (일본, 재원분담합의 서명 거부)

1998. 9. 10 제7차 미·북 고위급회담 합의문 발표(제네바 핵합의 이행, 미사일 문제 논의 지속, 4자회담 재개 등에 합의)
1998. 9. 11 한·미 외무장관 회담(북한핵, 미사일, 4자회담 등 논의)
1998. 9. 17 미하원, 대북 중유공급 예산 3천5백만 달러 전액 삭감
1998. 9. 24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 공동선언문 채택(북한 핵 동결 촉구 및 경수로사업 지원 다짐)
1998. 10. 15 미의회, 대북 중유공급 예산 3천5백만 달러 부활
1998. 10. 15 KEDO, 경수로 부지준비공사계약(PWC) 3개월 연장
1998. 11. 9 「대북경수로 재원분담 결의안」 채택
- 한국: 총사업비 46억 달러의 70%인 32억 2천만 달러 부담
 - 일본: 10억 달러 정액 부담
 - 미국: 중유공급과 잔여액 충당 위해 노력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개관: 추진현황과 과제」.
서울: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1997.
- _____.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서울: 경
수로사업지원기획단, 1998.
- _____. 「대북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에 관한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결의안」. 서울: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 1998.
- 전동진. 「일본의 대북한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전봉근. 「통일안보정책 결정체계 연구: 북핵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1998.
- 전성훈.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6.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5호 (1998).
- Bailey, Kathleen. *Strengthening Nuclear Non-Prolifer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KEDO. *Annual Report*. 1996/1997.
- Kenneth 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A General The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3.
- Reiss, Mitchell.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2. 논 문

- 구영록. “남북한 거래의 분석틀.” 「남북한 정치통합과 남북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전성훈. “남북 핵협상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평화문제연구소.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론,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한국」 (1998.5).
- _____ . “경수로 건설비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한국」 (1997.10).
-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홍관희. “남북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홍양호.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의 배경, 전개과정 및 전망.” 「평화전략연구」 제3집. 경산대 평화전략연구소, 1998.
- Eberstadt, Nicholas. "Assessing 'National Strategy'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viii, no. 1. (Summer 1996).
- Huang, Jing. "Why is Pyongyang So Defiant on the Nuclear Issue?" *Korea and World Affairs*. (Fall 1996).
- Kartman, Charles.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1998.9.10).
- Kim, Samuel. "North Korea in 1994: Brinkmanship, Breakdown,

and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35, no. 1. (January 1995).

Koh, B.C. "North Korea's Approaches to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Draft Paper to be presented at 1996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Nov. 15-17, 1996).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CRS Issue Brief*. Washio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98. 4. 15.

_____. "US Policies Toward the Two Koreas." (Paper prepared for the 1996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November 15-17, 1996).

Perkovich, George. "Nuclear Proliferation." *Foreign Policy*. (Fall, 1998).

3. 기 타

「로동신문」

「민주평통」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평양방송」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Korea Herald

Korea Times

Korea's Economy

Asia Wall Street Journal

Economist

Electronic Journal

Herald Tribune

Newsweek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Times

Washington Post

기타 문건

KEDO. *The Executive Board of the KEDO Resolution*, No. 1998-13(1998.8.31)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1998)

US Senate Hearing on North Korea, Testimony by Kartman, Kurt Campbell, and Robert Gallucci (1998.9.10)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Rust Deming's Testimony, "KEDO, Agreed Framework remain Key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1998.7.13)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著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共著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보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이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이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199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auto;"> 신청인 (인) </div>				

절 취 산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